

Macro hot issue

금리 인상의 시대, 부채 점검: (1부) 가계부채

삼일PwC경영연구원
September 2022



1. 배경: 급격한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

- 미 연준은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① 2021년 11월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② 정책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③ 대차대조표 규모도 축소^(**)해 나가기로 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음. 이는 2014~2019년 상황과 비교 시 매우 빠른 속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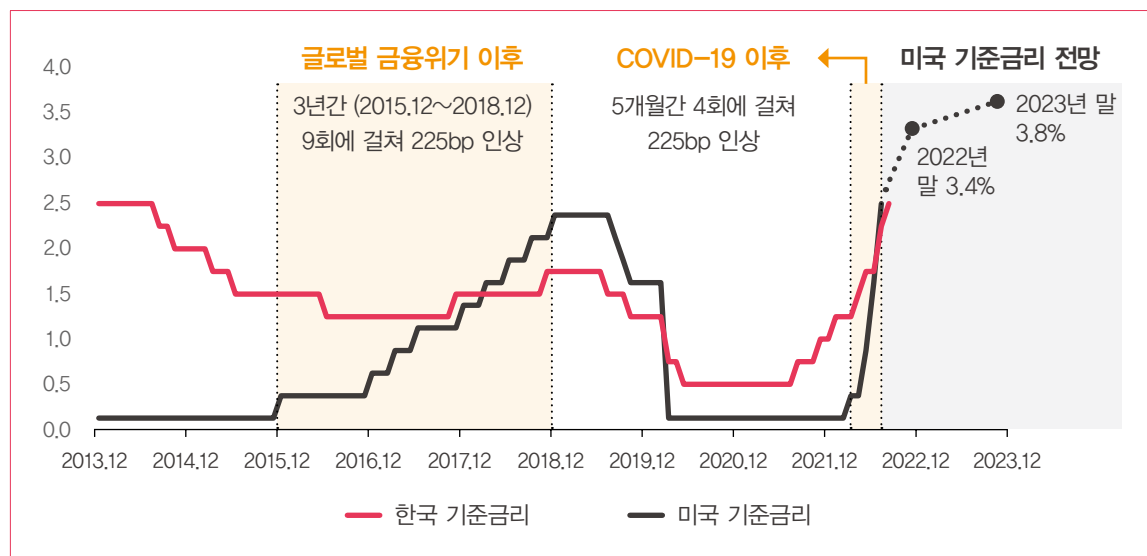
(*)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매입하던 채권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것이 테이퍼링(Tapering)

(**) 대차대조표 축소는 채권을 팔아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감축한다는 의미. 연준의 자산 대부분은 채권이어서 이는 곧 보유 채권 매각을 뜻하며,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도 부름

-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도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세가 이어지고 있음(한국 기준금리 2021년 5월 0.5% → 2022년 8월 2.50%로 200bp 인상). 장기간의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COVID-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배경으로 국내 경제 주체들은 부채 규모를 확대해 온 상황이므로, 금번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예상외로 클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경제 주체의 부채 수준 점검 및 한계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도표 1] 미국 및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자료: 미국연방준비위원회, 한국은행

[도표 2]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비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vs. COVID-19 이후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후
테이퍼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매입 규모를 2014년 1월~10월 중 7차례에 걸쳐 \$100억씩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매입 규모를 2021년 11월부터 매월 \$150억 축소 2022년 1월부터는 매월 \$300억 축소
기준금리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2월~2018년 12월 9회에 걸쳐 225bp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3월~2022년 8월 중 4회에 걸쳐 225bp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0월부터 매월 \$100억 축소 3개월마다 축소 규모를 \$100억씩 확대 2018년 10월~2019년 7월 중 매월 \$500억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6월부터 매월 \$475억 축소, 2022년 9월부터 매월 \$950억 축소할 계획

* 자료: 미국연방준비위원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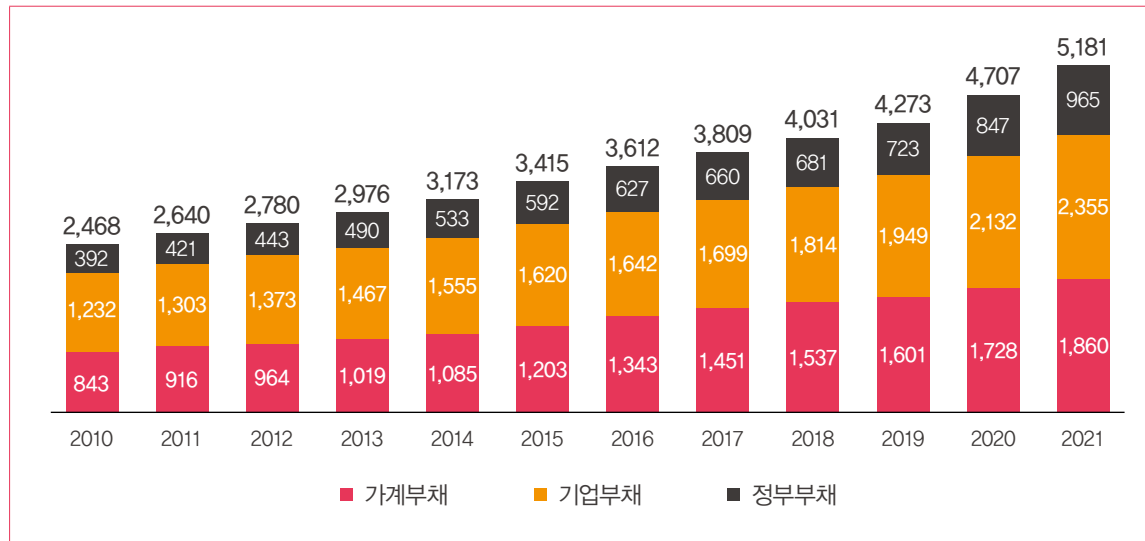
2. 국내 부채 현황

- 2021년 말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5,181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266%임. 2010년 말 대비 GDP가 1.5배 증가한데 반해 부채 규모는 2.1배 증가하며, 경제규모 확대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
- 가계부채^(*1)는 2010년 말 843조 원에서 2021년 말 1,86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됨. 이는 주요국에 비해서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임
- 기업부채^(*2)는 2021년 말 기준 2,355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113.7%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당시 수준(1997년 말 107.1%)을 상회했음. 동 비율의 최근 상승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도 가파른 양상임
- 정부부채 역시 COVID-19 대응으로 인해 2019년 말 723조 원에서 2021년 965조 원으로 증가함

(*1) 가계부채: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 대출(95%)과,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판매신용(5%)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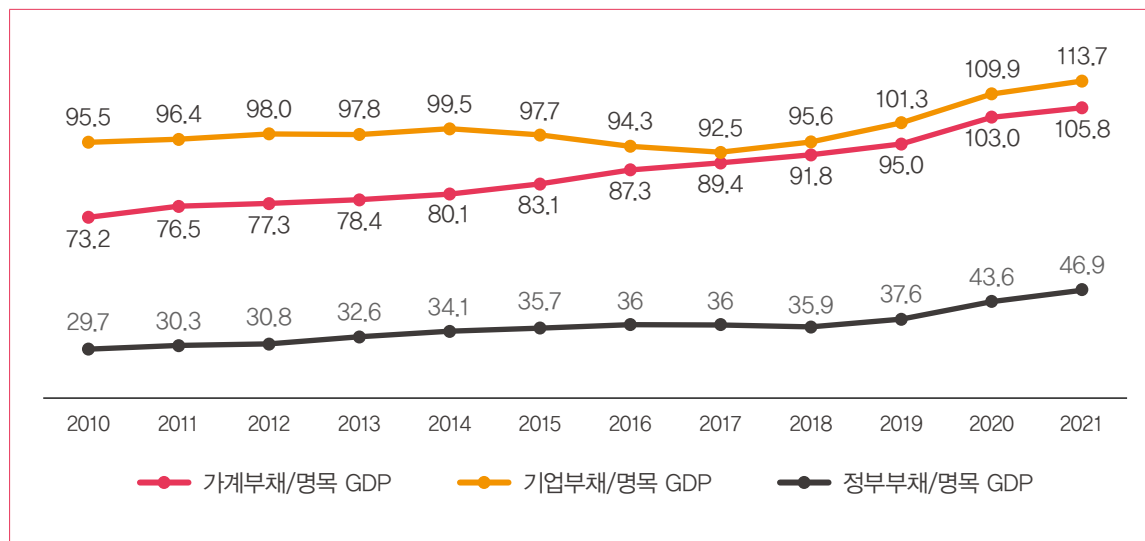
(*2) 기업부채: 비금융 기업 부문의 부채 중 대출금, 채권 및 정부 융자 잔액의 합계

[도표 3] 경제 주체별 부채 현황 (단위: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도표 4]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 글로벌 주요 국가와 부채 수준을 비교해 볼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업부채 또한 상위권에 위치함. 상대적으로 정부부채는 양호한 편임

…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과 빠른 증가 속도는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보고서에서는 가장 우려가 높아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가계부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

[도표 5] 글로벌 주요 국가(37개국) 대비 부채 수준 비교: 2021년 말 기준 (단위: %)

순위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비금융 기업)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
1	레바논	115.7	일본	247.3	홍콩	292.9
2	한국	106.0	레바논	236.9	레바논	264.6
3	홍콩	90.9	싱가포르	150.6	중국	154.8
4	영국	85.8	미국	126.3	베트남	137.4
5	태국	77.9	영국	120.3	싱가포르	135.3
6	미국	77.4	유럽	114.9	한국	115.7
7	말레이시아	74.2	브라질	91.7	일본	115.2
8	일본	65.3	이집트	87.2	유럽	110.3
9	유럽	60.5	인도	84.5	칠레	103.4
10	중국	60.4	파키스탄	83.4	러시아	82.5

* 정부부채 부문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7개국 중 26위

*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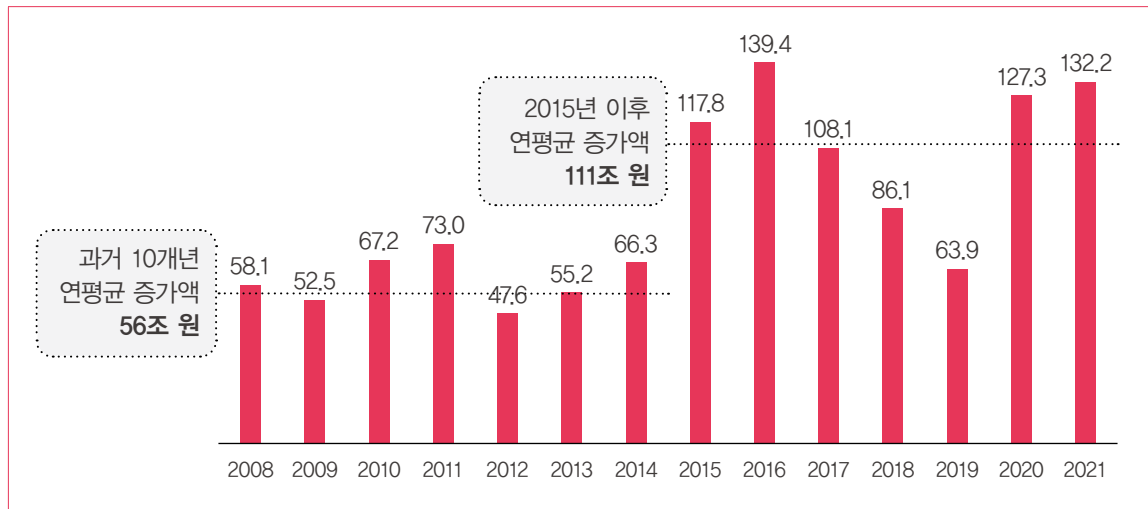


3. 가계부채 현황 및 분석

①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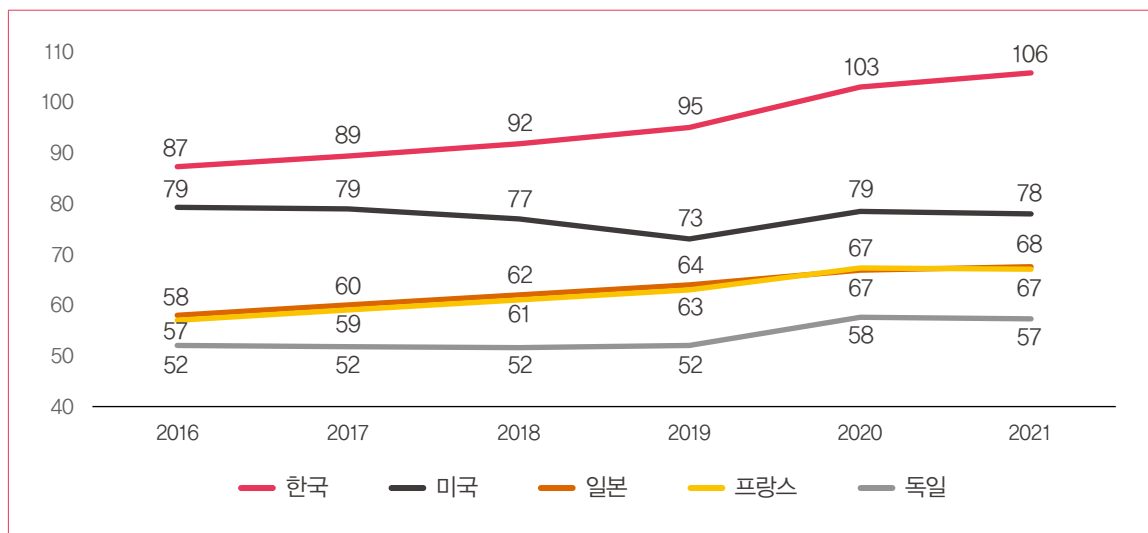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가계부채가 상대적·절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양적 위험이 상승함(연평균 증가액 - 2005~2014년: 56조 원 vs 2015~21년: 111조 원). 특히 2020년 이후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표 6] 국내 가계부채 증감금액 (YoY)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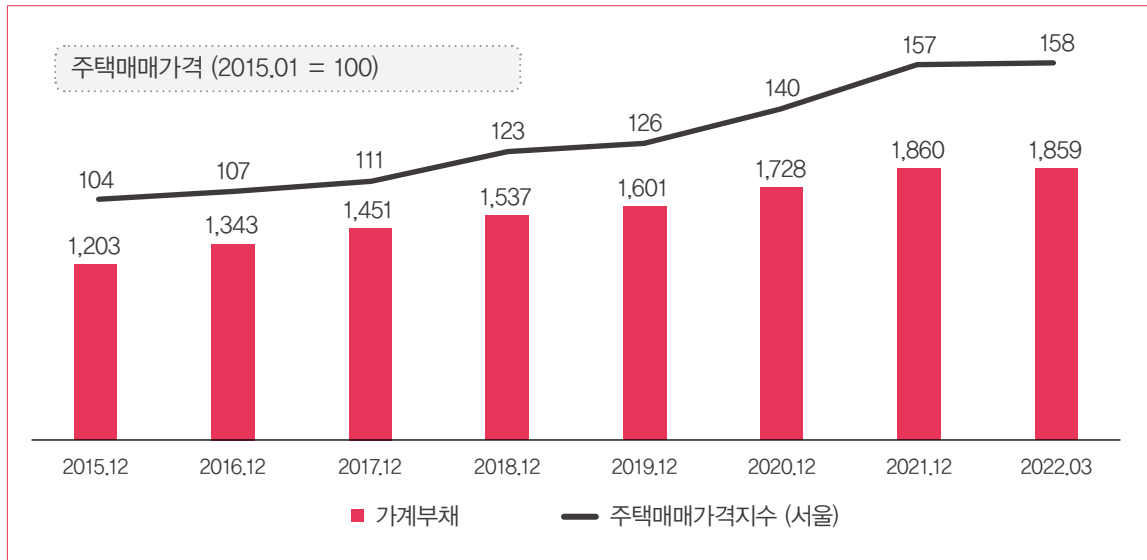
[도표 7]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단위: %)



* 자료: OECD, 「OECD National Acco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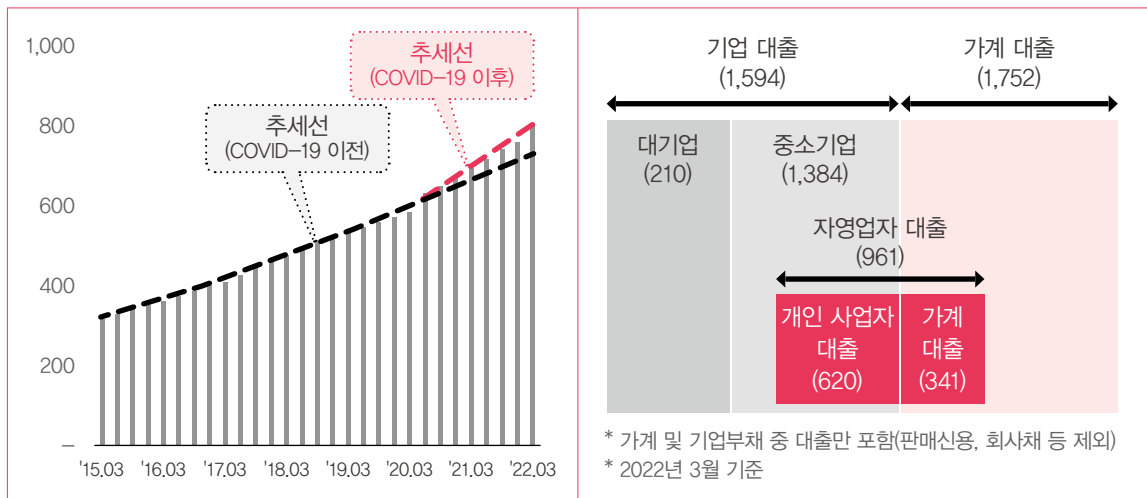
-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축소와 주택시장 활황으로 인한 주택자금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나, COVID-19 이후에는 자영업자 위주로 사업목적형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로도 퍼져 있어, 최근의 급격한 대출 증가 고려 시 경제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임
 - 2022년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총 961조 원으로, 전체 민간 대출(기업 및 가계)의 29%를 차지. 이 중 65%가 기업 대출, 35%는 가계 대출로 분류

[도표 8] 주택 가격 추이와 가계부채 (단위: 조 원, pt)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토부

[도표 9] 자영업자 대출 잔액(가계·기업 모두 포함) [도표 10] 자영업자 대출 구성 (단위: 조 원)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② 차주 속성 분석

□ 대출 속성 고려 시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 대출 속성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은행 대출 외에도 카드·캐피탈·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액이 많고, 여기에 외상·할부미상환액·개인 간 대출 비중도 높아, 다중채무 및 고금리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
- 특히 COVID-19 기간 동안 사업소득 감소로 인해 대출 속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은행 외 대출이 더 큰 폭 증가했음

-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차입 비중: 2019년 72% → 2021년 70%

[도표 11] 가구당 평균 금융 부채 - 대출 기관별 (단위: 만 원)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등	전체 평균
2019	금융부채	6,841	2,597	8,943	2,151	5,755
	은행	5,493	1,492	6,423	1,451	4,314
	제2금융권	1,032	795	1,986	551	1,113
	개인·직장	316	310	534	149	328
2020	금융부채	7,331	2,740	9,471	2,314	6,050
	은행	5,814	1,514	6,634	1,645	4,479
	제2금융권	1,171	881	2,240	466	1,204
	개인·직장	346	345	597	203	367
2021	금융부채	8,044	2,735	9,728	2,365	6,518
	은행	6,517	1,641	6,826	1,682	4,920
	제2금융권	1,166	836	2,277	512	1,232
	개인·직장	361	258	625	171	366

* 은행권은 주택 대출, 제2금융권은 기타 대출 증가세가 큼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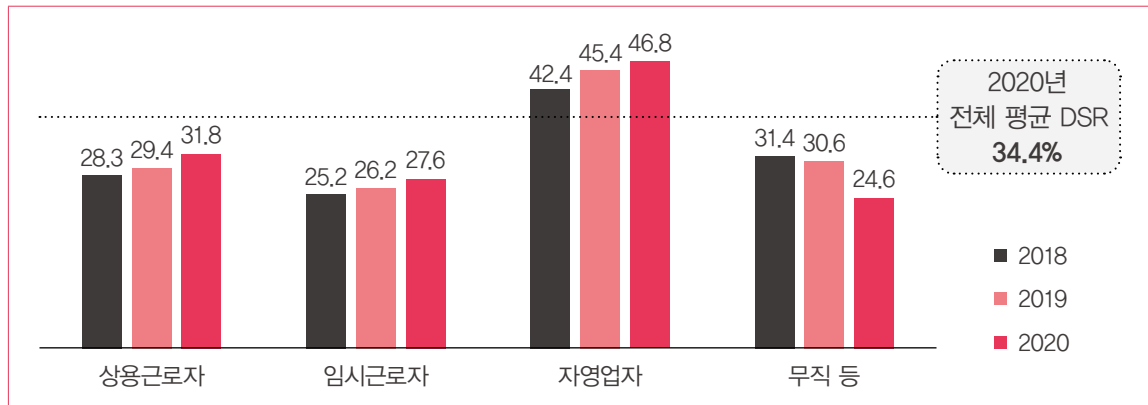
□ 소득 기반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살펴볼 경우에도, 소득 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2020년 자영업 가구의 평균 DSR은 46.8% 수준으로, 이는 자영업자가 연 소득의 46.8%를 원리금 상환액으로 사용함을 의미. 자영업자의 높은 DSR 수준 및 비율 상승 추세로 볼 때,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다른 직업군 대비 열위한 것으로 보여짐
- 2019년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 상황 부담*은 낮은 편이었으나,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차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가계 평균 이자율: 2018년 3.4% → 2019년 3.2% → 2020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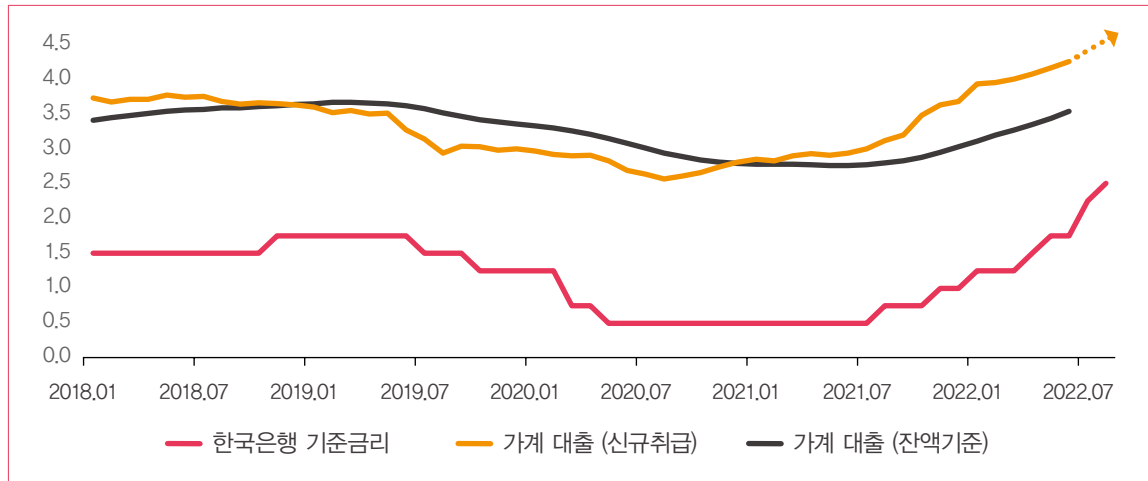
자영업자 가구 평균 이자율: 2018년 3.4% → 2019년 3.3% → 2020년 2.9%

[도표 12] 가구당 평균 DSR (단위: %)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도표 13]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가계 대출 금리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③ 건전성 분석

□ 급증한 가계부채 규모,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임. 그러나 하반기 지속될 금리 인상과 2022년 9월 이후 COVID-19 금융지원책이 종료되는 점 고려 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전체 가구 중 고위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위험 가구의 높은 DSR 고려 시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상환 능력의 급격한 저하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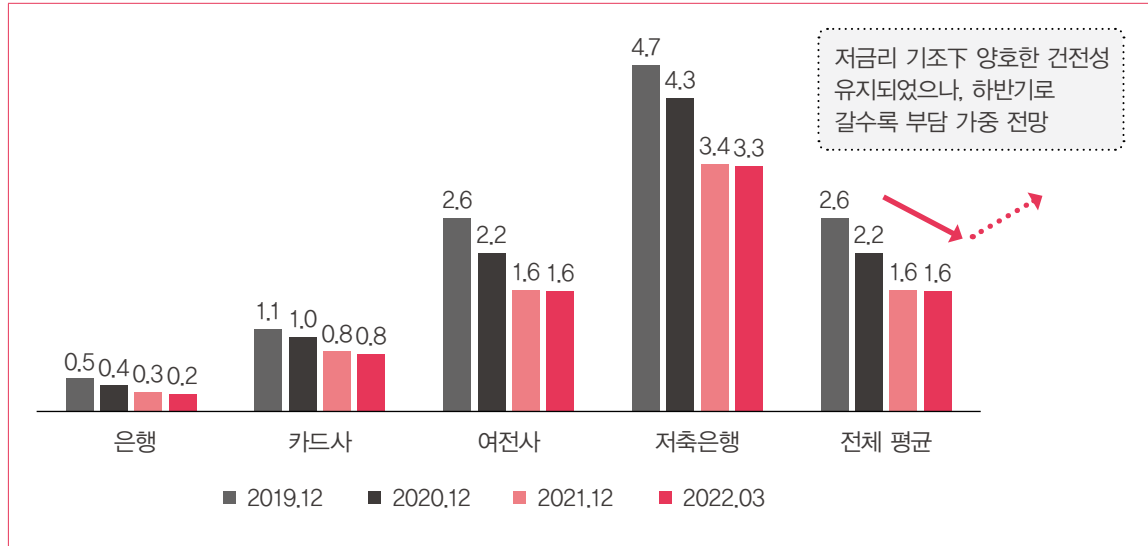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상 및 DTA(Debt to Asset) 100% 이상인 가구

[도표 14] 고위험 가구 수 비중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위험 가구 수 (만, 가구)	29.9	32.0	32.4	30.4	37.6	40.3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중 (%)	2.8	2.9	2.9	2.7	3.3	3.4

- 특히 2020년 4월부터 진행된 'COVID-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의 Exposure는 2021년 말 기준 134조 원. 이는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며, 향후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해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도표 15] 주요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도표 16] COVID-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대출 잔액

(단위: 조 원)

구분		2021년 7월 기준	2021년 12월 기준	증감
은행		86.5	90.1	3.6
	만기연장	78.9	83.4	4.5
	원금 상환 유예	5.3	5	-0.3
	이자 상환 유예	2.3	1.7	-0.6
제2금융권		3.2	3.6	0.4
	만기연장	0.5	0.4	-0.1
	원금 상환 유예	1.5	1.5	0.0
	이자 상환 유예	1.2	1.7	0.5
정책금융기관		30.9	40	9.1
합계		120.6	133.7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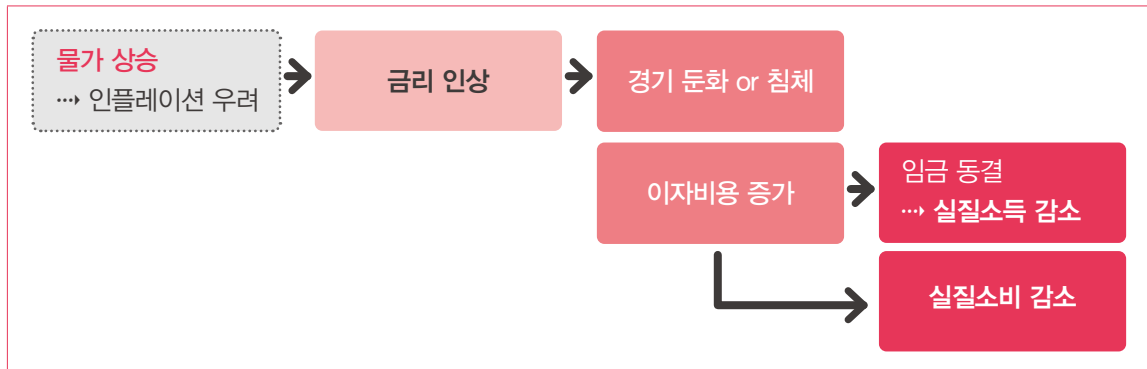
* 자료: 금융위원회

4. 시사점: 금리 인상이 경제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① 거시경제 측면: 경제 악순환 구조 초래 가능성

- 물가 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실질소비가 줄어들 전망임

[도표 17] 금리 인상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한편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는 저소득 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빈부의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할 수 있음

② 가계부채 측면

-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 1,862조 원(1인당 평균 9,357만 원의 빚 보유)으로 차주 1인당 306.8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함(한국은행, 2021년 말 기준) → 2021년 말 기준금리가 1.0% 임을 감안 시 현재 2.50%의 금리 인상으로 연간 이자비용은 98.4만 원 수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 25bp 상승 시 연간 이자비용은 16.4만 원 증가 추정

→ 연간 가계 이자비용은 405.2만 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2021년 말 가계부채 규모와 동일하다는 가정)

-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47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년 예상되는 연간 이자비용 증가분(98.4만 원)은 크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 규모는 1인당 평균 대출 규모(9,357만 원)보다 클 것이며 이자비용과 원금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가계부채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될 수도 있음

-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자산 가치 증가, 정책적 지원 등으로 현재까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그러나 금리 상승을 필두로 한 제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건전성 저하 우려가 높으며, 최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향후 건전성 저하는 과거 대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제2금융권의 경우는 가계 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 부담이 큰 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행에서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가계부채 관련 Stress Test를 진행하였는데(2021년 06월), 이 경우 부도율이 0.83%에서 1.18%로 0.35%p 증가하고, 금융기관 손실금액은 5.4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약 80%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업권들의 평균 자본 비율은 모두 금융당국 규제 수준을 상회하여, 부채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은 대체로 건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 Stress Test 시나리오: 2021년 4분기 이후 GDP 역성장(-2.2%), 주택 가격 하락(-3.5%) 등
-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금융기관과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짐

[도표 18] 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가계부채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거치기간(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도 장기(최대 5년)로 운영 • 저금리 대출 전환. 총 8.7조 원 규모 보증·융자 공급: 신보 특례보증 8.5조 원을 통해 은행·비은행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Director

eunyoung.lee@pwc.com

+82-2-709-0824

오선주 Senior Manager

sunjoo.oh@pwc.com

+82-2-3781-9344

강서은 Manager

seo Eun.kang@pwc.com

+82-2-3781-9137

최형원 Associate

hyungwon.choi@pwc.com

+82-2-3781-9638

www.samil.com

S/N: 2209W-RP-032

© 202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